



주간통일정세 2011-29(2011.07.11~07.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2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평양 중앙동물원 현지지도(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현지 지도 했다고 전날 보도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전함.
- 이날 시찰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중수·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도 수행단에 포함

● 김정일, 김정은, 장더장 中부총리 접견(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장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친선대표단과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을 접견
- 이날 접견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과 리영호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내각 부총리 강석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영일, 김양건,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등이 참석

● 北양형섭, 中우방귀 위원장 면담(7/12, 신화통신)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방중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
-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 위원장은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수



상이 서명한 조약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법률적 기초가 됐다"며 "중국과 조선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함.

- 한편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9일 중국에 도착한 양 부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하고 텐진시를 시찰

● 北김영남, 방북 장더장 中부총리와 면담(7/12, APTN)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부총리와 12일 면담한 것으로 확인
- 이날 AP통신의 TV뉴스인 APTN이 평양에서 촬영한 화면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장 부총리가 인사하는 모습과, 이후 장 부총리 일행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돌아보는 모습이 잡힘.
- 장 부총리는 지난 10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13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

● 김정일 호위사령부 시찰...김정은 대동(7/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해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제963군부대는 김 위원장과 가족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로 알려져 있음.
- 이날 부대 시찰에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 위원이 동행했고, 호위사령관인 윤정린 대장, 김성덕 상장이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김정일·정은,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관람(7/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립연극단이 새로 제작한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부위원장 이외에도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은 공연관람을 마친 뒤 "우리의 혁명적인 연극은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서 위력한 사상적 무기"라



며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여 우리 인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

● **北김영남, 우등허 북중우호협회장과 담화(7/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우등허(武東和) 북중우호협회장을 비롯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북중우호협회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조선인민이 김일성 주석 동지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바란다"고 말함.

● **김정일·정은, 中예술단 공연 관람(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해 중국 간쑤성(甘肅)성 예술단의 무용극 '비단길 위의 꽃보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 이날 공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겸 당비서, 강석주 내각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최룡해·태종수 당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

● **김정일·정은, 은하수극장 개관기념 음악회 관람(7/1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리모델링을 마친 은하수극장에서 은하수관현악단의 개관기념음악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이날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경옥·김원홍·김영철·윤정린 당 중앙군사위원,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 당과 군의 고위인사들이 참석

나. 경제

● **美 대북식량지원 움직임 '주춤'(7/11, 연합뉴스)**

- 빠른 속도를 보일 것 같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이 주춤한 상태라며 연합뉴스가 보도



- 5월 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평가팀이 북한을 직접 방문, 현지 실태 조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팀의 방북 결과를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언급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 워싱턴 소식통은 10일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지원식량 전용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 내에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 미 정부 내에서 식량 지원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함.
- 통일부 "대북식량지원, 국제사회 지원과 별개"(7/11, 연합뉴스)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별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3주년과 관련해 명복을 비는 한편 "북한은 우리 사업자의 재산 몰수·동결, 재산정리 등 일방적 재산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 관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신변 안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함.
- 北하나전자, 평양에 레스토랑·사우나 개장(7/12, 연합뉴스)
 - '아리랑 DVD'로 유명한 북한의 조선하나전자합영회사(하나전자)가 최근 평양 시내에 레스토랑과 대규모 레저시설을 건립, 운영을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관련 투자회사인 피닉스 커머셜벤처스(Phoenix Commercial Ventures Ltd)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전자의 본부가 평양 통일거리 시장 근처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본부 내에 레스토랑과 수영장, 사우나, 미용실, 바, 체육관 등의 레저시설도 문을 열었다"고 밝힘.
- "北, 평양 10만 가구 건설자금 주민에게 걷어"(7/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10만 가구 주택건설 자금을 주민에게 걷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RFA는 만수대지구를 비롯한 평양시 주택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지원금을 각 기관, 인민반, 학생에게 부과했



다고 전함.

- 평양시내 한 가정은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내는 돈이 매달 1만원을 넘는다고 방송에 전함.
- RFA는 "북한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10만 가구 공사를 주민에게 떠맡겼다"고 지적

● **中, 화룡-남평 철도 10월 완공(7/12,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과 남평(南坪) 통상구를 잇는 철도가 오는 10월 완공된다고 연변일보가 12일 보도
- 남평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이 철도가 개통되면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의 중국 반입이 늘고 대북 교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봄.
- 중국 통화(通化)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해마다 120만t의 철광을 수입하고 있으며 화룡-남평 철도가 개통돼 접근성이 개선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은 장기적으로 화룡-남평-무산 철도를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

● **北 광산·룡매도서 간척사업 한창(7/1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평안북도 광산과 황해남도 룡매도 등에서 총 5.8km에 달하는 방조제를 건설하는 등 간척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북한의 대남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2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평안북도 광산간척지 2단계 건설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수십만㎡의 토량이 처리되고 6만㎡의 돌입히기가 진행됐으며 3천800여m의 방조제가 뺏어나갔다"고 밝힘.
- 또 룡매도간척지 건설장에서는 건설 시작 이후 반년 남짓한 기간에 7만6천여㎡의 돌입히기를 통해 바다 위에 2천여m의 방조제를 세웠다고 소개
- 우리민족끼리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간척지 건설자들을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을 새긴 연합기업소의 일군과 건설자들의 창조적 열정이 낳은 자량찬 결실"이라고 평가

● **日의원들, 대북식량지원 금지 美에 촉구(7/12, 교도통신)**

-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의원들은 12일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을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식량지원을 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초당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赇夫) 대표는 이날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과거 행태를 감안해, 쉽게 식량지원을 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말함.

- 번스 차관은 일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도 그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함.

● **경기도·인천시, 올 들어 세 번째 방역물품 北 전달(7/13, 연합뉴스)**

- 경기도와 인천시는 13일 4억1천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이번 지원은 올 들어 지난 5월23일과 지난 1일에 이어 세 번째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5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기 유충 구제약품과 모기향 등 1억 6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

● **北, 과학연구기관에도 독립채산제 압박(7/15, 연합뉴스)**

-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자체적인 생산수단이 거의 없는 응용과학연구기관도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11.2호)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응용과학연구기관들을 점차적으로 반(半)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로 넘길 데 대한 사상을 제시했다"고 밝힘.
-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주로 공장과 기업소 같은 생산기관이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경영관리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해당 기관이 알아서 생산해 벌어들여 먹고 국가의 계획도 완수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中 훈춘, 올 상반기 대북 교역 급증(7/15, 연변일보)**

- 훈춘의 대북 통상구(세관)인 권하(圈河)통상구의 올해 1-6월 수출입 화물량이 9만2천255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4% 증가했다고 연변일보가 15일 보도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원정리와 마주한 권하통상구의 대북 교역량이 급증한 것은 라선특구 공동개발과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수, 대북 관광 활성화 등 북·중간 경제 교류가 활기를 띠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길이 열리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권하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했으며 공사에 쓰일 물자와 인력이 대거 북한에 들어감.



- **스웨덴, 北에 294만 달러 의료지원(7/16,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유럽 구호단체들을 통해 294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의료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요아킴 베이지모 대변인은 이같은 대북 의료지원 계획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VOA측에 밝힘.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2011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15일 현재 총 4천500만 달러로, 스웨덴은 개별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인 736만 달러(16%)를 기부

- **"북 18개 은행 운영...압록강銀 자산 최대"(7/16,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는 18개 은행이 영업 중이며 그중 미국의 제재대상인 압록강개발은행이 최대 규모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 VOA는 전세계 은행정보 제공 전문기관인 '뱅크스 앨머넥'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해 압록강개발은행, 동방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광선은행, 단천상업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굶주린 北군인들 탈영·식량도독질 잇따라"(7/17, 오늘의북한소식)**
 - 17일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11호)에 따르면 군부대 식량 부족으로 신병훈련소에서 탈영병이 속출하거나 탈영병이 강도짓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에 있는 4·25훈련소에서는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풀뿌리와 산나물을 섞어 '풀밥'을 지어먹던 훈련병 일부가 탈영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짐.
 - 탈영사례가 증가하자 당국이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탈영병에 대해서는 "복귀할 경우 기회를 주겠다" "복귀를 거부하는 탈영병은 탄광 등에 배치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함.
 - 복무 중인 군인이 농가에서 감자 등을 훔쳐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군부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인을 경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 사회·문화

- **"北인구 2050년까지 10%↑...약 2천700만 명"(7/12, 미국의소리(VOA))**
 - 미국 인구통계국이 최근 개정한 국제데이터베이스(IDB)에서 북한의 총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약 10% 늘어난 2천696만9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
 - 인구통계국은 올해 북한의 인구를 2천445만7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올해 0.5%에서 2024년 0.4%, 2028년 0.3% 등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46년에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올해 69세에서 2050년에는 78세로 늘어날 전망

● "北 종교 신자 처형·투옥 여전...개선기미 없어"(7/12, 미국의소리(VOA))

- 영국 인권단체인 '국제소수자권리그룹'(MRG)은 북한이 헌법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신자들을 처형·투옥하는 등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힘.
-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MRG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작년 8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지하교인 23명이 체포돼 3명이 처형당하는 등 북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포정치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함.
- MRG는 또 북한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당국이 통제하는 소수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함.
- 이어 MRG는 북한 당국이 북한 내에 기독교신자 1만2천명, 불교신자 1만명, 카톨릭신자 800명이 있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해 몰래 종교활동을 하는 '지하신자'를 포함하면 실제 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

● 北수해, 남북관계 '긍정변수'로 작용하나(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6월25일부터 사흘 동안 조선 대부분 지방이 태풍 5호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강한 바람과 무더기 비, 해일을 몰아온 태풍으로 여러 지방에서 인명피해가 났고, 160여 동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2만1천여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유실, 매몰되었다"고 보도
-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대결로 치닫던 남북관계에 대북 수해 지원이 일정 정도 대화분위기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하는 등 북한의 수해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대북 수해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
- 유럽연합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고 미국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나 북측 수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북측에 대화 의지가 있는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北황강댐 방류한 듯..군남댐 수문 모두 열어(7/13, 연합뉴스)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13일 오후 8시25분께 필승교 수위가 경계수위 5m를 훌쩍 넘어 6m에 가까워지자 군남홍수조절댐의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2천150t을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남댐의 한 관계자는 "수위 상승 속도로 보아 북한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북측이 발전을 위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으로부터 방류 사실을 통보받은 비는 없다."라고 말함.



- WFP "북한인구 20~34% 영양결핍"(7/13, 미국의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발표한 '2011년 세계 기아현황 지도'에서 북한을 영양결핍 인구가 전체의 20~34%를 차지하는 국가로 분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
 - 북한은 올해 몽골, 인도와 함께 4단계로 분류됐으며 최하위 5단계 국가에는 에티오피아, 콩고,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가 대부분 포함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부총리, '北과 전면적 협력확대' 강조(7/11, 연합뉴스)
 - 중국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장덕강(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함.
 - 평양에 이날 오전 도착한 장 부총리는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최영림 북한 총리를 만나 이같이 강조
 - 장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북-중 간 고위급 상호방문이 빈번히 이뤄졌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이 진행됐다면서 양측 사이에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어졌다고 강조
 - 또 장 부총리는 전통적 우의를 발전시키고 양측 지도부의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할.
 - 장 부총리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중국과 북한이 직면한 두 가지공통과제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점진적인 무역확대, 투자와 협력 촉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이어 최영림 총리는 북한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양측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중우호조약 5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장덕강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오늘 전용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 중국 친선대표단은 장 부총리 외에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초하경 국무원 부비서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양옌이(楊燕怡)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으로 구성
- 北中우호조약 50주년 행사 양국서 잇따라(7/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11일)을 맞아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10일 밤 지재룡 대사의 주관으로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연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연회에는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9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같은 날 평양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가 마련한 연회가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최영립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이 대거 초대됐고, 중국 측에서는 북한을 방문 중인 장덕장(張德江) 부총리,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
- 조약 체결 50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양국 차원의 문화 교류도 활발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전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성격

● 후진타오, 양형섭 등 北대표단 접견(7/11, 중국중앙TV)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일인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
- 후 주석은 "과거 50년 동안 중국과 조선은 우호협력원조조약의 정신 아래 서로 존중하고 도우며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왔다"며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이어 전통을 바탕으로 협력 정신을 강화하자며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지속하고 전략 소통을 심화하자고 덧붙임.

● "北이 의장국이라니"..캐나다, 군축회의 보이콧(7/11, CBC방송)

-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CD) 순회의장국을 맡은 것에 항의해 캐나다가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기간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CBC 방송이 보도
- 존 베어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11일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은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CBC방송이 전함.
- 그는 북한의 의장국 취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솔직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의장국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9일까지 군축회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은 군축 회의체의 신뢰할 의장국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군축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려는 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는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
-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는데 대해 특별한 문제 제기를



- 할 계획은 없다면서 군축 문제는 기존의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 등을 통해 해결을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 빅토리아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장국은 60 개국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이번은 그들(북한)의 차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의장국을 맡는데 따른 특별한 피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함.
 - 그는 "군축회의는 만장일치에 기반한 회의체로, 우리와 문제가 있는 국가가 단지 의장국이 된다는 이유로 어떤 것이 결정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지적
 -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이 회의체와 관련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이 회의체를 통해 큰 협상을 하지 않기로 우리는 선택했고, 군축회의는 낮은 수준의 중요하지 않은 회의체"라고 이유를 설명

● 中외교부, 홈페이지에 北김정은 사진 노출(7/1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부처 홈페이지에 북한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찍힌 사진을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중국 외교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을 위해 방북한 장덕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12일 접견하는 사진을 13일 홈페이지에 실었으며, 이 사진에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모습도 포함
- 중국 방송·신문 매체들은 그동안 김정은 사진과 영상을 종종 보도해왔으나, 중국 정부가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김정은 사진을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
- 문제의 사진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측이 이번에 방중한 장 부총리 통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 등의 선물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에 김 위원장 부자와 더불어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모습이 찍혀있다. 중국 측 인사로는 장 부총리와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 등의 모습이 나와 있음.

● 방북 장덕장 中부총리 일행 귀국(7/13, 조선중앙통신)

- 북중 우호조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최근 방북한 장덕장(張德江)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친선대표단이 13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장 부총리 일행이 이날 귀국에 앞서 평안남도 대안군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찾아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최신 설비들을 갖춘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깊은 관심 속에 돌아봤다"고 전함.

● 美 "언론자유·정보접근 확대 北허용 기대"(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서방언론에 문호를 일부 개방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좀 더 많은 정보 접



근 및 언론의 자유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P통신의 평양 지국 개설 합의와 로이터통신의 북한 영상뉴스 공급 합의 발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中 "북중우호조약, 지역안정에 적극적 역할"(7/1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 14일 "중조(중북) 우호협력원조조약이 중국과 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중앙(CC)TV4채널이 최근 조중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 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함.
- 그는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공통의 이익에 부합 한다"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라고 강조
-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조 관계를 발전시켜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

● **北리용남 "시리아 정부 안보 조치 도울 것"(7/15, 사나(SANA))**

- 리용남 북한 무역상이 시리아 정부가 서방의 음모에 맞서 안보를 지키려고 취하는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짐.
- 시리아 관영통신 사나(SANA)에 따르면 리 무역상은 지난 14일 북한과 시리아가 무역, 정보, 경제, 과학 분야의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시리아 국민과 군, 정부가 함께 음모에 맞서는 것을 보았다"며 "(북한은) 시리아 정부가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과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군수물자 거래 및 핵 협력 의혹을 사고 있으며, 사나는 이날 양국이 무역 등 네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의정서에도 서명했다고 전했다. 협정 조인이 이뤄진 장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타 (대외 일반)

- 美軍주도 '韓美 연합과학화훈련'(6.27~7.7) 실시 관련 "남조선 괴뢰들을 우리(北)와의 대결에로 더욱 부추기는 계획적·고의적 反北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7/12, 중통·노동신문·평방)
- 中공산당창건 90돌 경축행사들과 최근 러시아 정부의 戰力무력강화 움직임 및 이란 핵문제 관련 이란-서방국가들間 異見 傳言(7/12,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중방)
- 中인민대외우호협회·中朝우호협회, 7.11 '中-北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관련 베이징에서 연회 마련(7/13, 중통)·조선친선대표단(단장 : 양형섭)과 朝中친선협회대표단(단장 : 최창식 보건상), 지재룡(駐中 북대사) 등 초대

나. 6자회담(북핵)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17일 방한(7/13, 연합뉴스)

-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소식통은 일본 6자회담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을 방문, 18일에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함.
-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과 관련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함.
- 또한 스기야마 대표는 위성락 대표에게 일본은 한미일 3국이 견지하고 있는 3단계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3. 대남정세

● 남북적십자, 국제회의서 비공식 대화(7/11, 연합뉴스)

- 남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지난 5~7일 중국에서 열린 적십자 관련 국제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11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회의에 직접 참석한 한적 관계자는 이날 "지난 5~7일 중국 내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어얼뒤스(鄂爾多斯)시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사 리더십 회의'에서 김용현 한적 사무총장과 백영호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 부위원장이 티타임 등을 이용해 대화했다"고 밝힘.
-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남북 적십자 차원의 교



류와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건네자 백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는 국제회의에서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제의하라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측 관계자가 남측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하면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 관련, "북측 관계자가 받아들일겠다는 말은커녕 검토해보겠다는 말도 한 적 없다"고 일축

● 남북, 금강산 재산권 13일 협의키로(7/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 민관합동협약의 '협의' 제의에 "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고 밝힘.
- 통일부는 연합뉴스에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이날 오후 3시 금강산 현지에 있는 현대이산 사업소를 통해 구두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전함.
- 통일부는 "이번 협의기회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업체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금강산 재산권' 민관합동협약단 방북(7/13, 연합뉴스)

-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합동협약단이 13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협약단은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지구로 들어감.
- 이날 협의는 북측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서 들어오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따른 것임.

● 北 '금강산 협의' 보도...추가협의 시사(7/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남북이 전날 진행한 금강산지구 남측 재산권에 대한 협의내용을 전하면서 추가 협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
-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 협의와 관련, "남측 기업기들이 돌아가 더 연구해 입장이 서면 다시 만나 협의를 가질 것이며 만일 남측이 7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미 선포한 대로 남측 부동산들을 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남측 당국 관계자들은 돌아가 상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경로로 다음번 협의와 관련한 입장을 알려오겠다고 했다"고 덧붙임.
- 통신은 또 북측은 협의에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설치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금강산 국제관광법 내용을 통보하고 "남측 당사자들이 국제관광에 참가하든지, 임대 또는 매각을 선택할 데 대해 제안했다"고 전함.



- **北 장웅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바람직"(7/13, 연합뉴스)**
 - 북한 체육계 핵심 인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안에 대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참석차 일본에 입국한 북한의 장 웅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13일 오전 나리타(成田)공항에서 평창이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남북 공동 개최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답변

- **"평창 동계올림픽 北 발언은 '간접 경고'"(7/14, 더타임스)**
 -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를 희망하는 북한의 말들 속에는 올림픽을 훼방 놓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4일 풀이
 - 더 타임스는 이날 '북한, 동계올림픽 위협(Pyongyang threatens to target Winter Olympics)'이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북한의 장웅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일본 발언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룸.
 - 이 신문은 "장 위원이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것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이어 "'영향(influence)'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1988년 서울올림픽 방문객에게 겁을 주려고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1987년 한국 만항기 폭파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

- **개성공단 임금협상..5년 연속 5% 인상 가능성(7/15, 연합뉴스)**
 -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최근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임금협상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되었으며, 올해 협상에서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월 63.814달러 수준이 된다고 뉴스는 전함.
 -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발족한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기업책임자회의'는 오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

- **北 "통일세 도입은 북침 체제통일 목적"(7/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책동'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주장
 - 논평은 "얼마 전 괴뢰 통일부 현인택은 통일세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세금보다는 기금위주로 마련하겠다고 떠벌렸다"며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미리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통일세 제안은 철두철미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말함.

- 이어 "통일세 제안이 각계 배척을 받자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남북협력기금"이라며 "이명박 일당은 민간단체에 주던 보잘 것 없는 자금마저 잘라버리거나 삭감하고 반통일 대결정책을 위해 기금을 탕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대결기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박의춘 외무상, 발리 ARF 참석"(7/12)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주최 측에 통보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2일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참가 자격으로 베트남 ARF에 참석해 북핵문제 대응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올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소식통은 "외무성 본부와 인도네시아 현지공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리 부상은 올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 북측이 통보한 명단에는 리홍식 국제기구국장과 김창일 아주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외상은 ARF 참석을 전후해 인도네시아 측과 양자 외교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이번 ARF에 북핵 협상라인에 속하는 리용호 부상 또는 리 부상을 대체할만한 북핵 관련 당국자가 불참할 경우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문제가 크게 쟁점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번 ARF 회의기간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 외상이 조우해 남북 외교장관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가 먼저든 그쪽이 제의하든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외교부, 내년 북핵·6자회담 예산 23% 감액 (7/13)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의 조건과 수순을 놓고 남북이 평행 대치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내년도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23%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13일 입수한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 일반예산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한 1조8천270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 항목별로는 다자관계협력 예산이 올해 170억2천만 원에서 내년 463억8천만 원으로 172.5%가 늘었다. 이는 내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319억6천만 원이 신규로 반영된데 따른 것임.
- 다자관계협력 예산 가운데 한반도 평화조성 외교 사업예산은 올해 87억



4천만 원에서 내년 67억 원으로 23.3%가 감액됐음. 특히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6억8천만 원)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 그룹 의장국 활동 강화(1억8천만 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지만,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사업 예산은 7억8천만 원에서 4억3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음.

● 日 6자회담 수석대표, 17일 방한(7/14)

-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밝혔음. 이 소식통은 일본 6자회담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한국을 방문, 18일에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과 관련한 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 스기야마 국장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및 미국의 6자회담 특사를 맡게 될 클리포드 하트와 만나 6자회담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스기야마 대표는 위성락 대표에게 일본은 한미일 3국이 견지하고 있는 3단계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보임. 3단계 접근 방식은 6자 틀 내에서의 양자회담과 6자 본회담을 갖기 전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나. 미·북 관계

● 〈美 대북식량지원 움직임 '주춤'〉(7/11)

- 빠른 속도를 보일 것 같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이 주춤한 상태임.
- 5월 말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평가팀이 북한을 직접 방문, 현지 실태 조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조사팀의 방북 결과를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언급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임.
-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된 오바마 정부 내부의 움직임도 거의 중단됐음.
- 워싱턴 소식통은 10일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식량사정이 당장 사람들이 굶어죽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지원식량 전용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 내에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 미 정부 내에서 식량지원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다만 오바마 정부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채 북한의 움직임에 주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유럽연합(EU)이 1천만 유로 상당의 대북식량 지원 방침을 이달 초 밝힌 데 대해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 이런 여러 사정들로 미루어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또 식량지원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음.
- 실제로 지금 당장 지원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에 지원식량이 도달하기까지는 수송 기간과 준비 작업을 감안할 때 2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 식량지원을 결정할 경우 북한에서 식량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가을에 지원식량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됨.
- 미북 간에는 아직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또 킹 특사의 방북 이후 미북 양측 간에 뉴욕채널 등을 통한 관련된 후속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음.

● 美 "언론자유·정보접근 확대 北허용 기대"(7/14)

- 미국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서방언론에 문호를 일부 개방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좀 더 많은 정보 접근 및 언론의 자유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기를 기대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P통신의 평양 지국 개설 합의와 로이터통신의 북한 영상뉴스 공급 합의 발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음.
- 그는 "AP통신이 그곳에 지국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북한 당국이 그들에게 좀 더 넓은 언론의 자유와 접근권을 허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정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 한다"면서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음.

● "美 상·하원 핵심의원, 대북식량지원 반대"(7/15)

- 짐 웹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방미중인 일본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의 두 의원이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 그는 일본 대표단이 방미 기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 및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음.
- 그는 "아무리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더라도 지원 식량은 결코 필요한 주민들에게 갈 수 없다고 국무부에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도 식량지원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음.



- 앞서 일본 의회 방미대표단은 지난 12일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측의 식량지원 요청을 미국이 거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음.
- 하지만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찬성 방침을 밝히고 있는 등 미 의회 내에서도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 코카콜라 대변인 "北진출 논의한 바 없다"(7/15)

- 미국 코카콜라 본사의 켄트 렌더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코카콜라 관계자 가운데 누구도 평양사업 진출을 논의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음.
- 미국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 방송에 "설령 코카콜라와 북한이 (코카콜라) 평양지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더라도 현재 북미 간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사실을 표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 방송은 또 코카콜라와 함께 평양 진출 기업으로 거론된 미국 KFC의 해외 사업부 공보실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앞서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박철수 총재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풍그룹의 주선으로 코카콜라와 KFC가 평양에 지점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다"고 부인했음.

다. 중·북 관계

● 中부총리, '北과 전면적 협력확대' 강조(7/11)

- 중국 친선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는 10일 북한과 전면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양자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밝혔음. 평양에 이날 오전 도착한 장 부총리는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최영림 북한 총리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 장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북-중 간 고위급 상호방문이 빈번히 이뤄졌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협력이 진행됐다면서 양측 사이에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장 부총리는 전통적 우의를 발전시키고 양측 지도부의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했음.
- 장 부총리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중국과 북한이 직면한 두 가지공동과제라면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점진적인 무역확대, 투자와 협력 촉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최영림 총리는 북한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양측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음.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중우호조약 50돌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장덕강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대표단이 오늘 전



용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 친선대표단은 장 부총리 외에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초하경 국무원 부비서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양옌이(楊燕怡)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으로 구성됐음.
- 대표단은 먼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북중우의탑에 헌화하고 강능수 북한 부총리 등과 함께 평양대극장에서 중국의 민간전설을 각색한 가극 공연을 관람했음.

● 北中우호조약 50주년 행사 양국서 잇따라(7/11)

-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11일)을 맞아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음.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10일 밤 지재룡 대사의 주관으로 조약 체결 50주년 기념 연회를 개최했음.
- 이날 연회에는 중국의 외교 분야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9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같은 날 평양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가 마련한 연회가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열렸음.
- 이날 행사에는 북한 측에서 최영립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부총리, 김영일 당 국제부장, 박의춘 외무상 등이 대거 초대됐고, 중국 측에서는 북한을 방문 중인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리청린(李盛霖) 교통운수부장, 왕루린(王儒林) 지린성장,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음.
-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북한은 양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 중국은 장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10일부터 13일까지 북한에 각각 보냈음.
- 조약 체결 50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양국 차원의 문화 교류도 활발함.
- 북한의 3대 예술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평양예술단은 10일 밤 베이징 전람관극장에서 가무 공연인 '활짝 핀 진달래'를 무대에 올렸고,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간쑤성예술단은 9일부터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무용극 '비단길 위의 꽃보라'를 공연 중임.
- 이 밖에도 평양국기미술단이 지난달 2일부터 베이징과 광둥성, 랴오닝성 등지를 돌며 공연을 하는 등 북한의 여러 예술·공연단이 최근 중국을 잇달아 찾고 있음.
-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전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서명으로 체결됐음.
- 이 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음.

● 후진타오 "中, 중북관계 매우 중요시"(7/12)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북한



과의 관계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우호협력원 조조약 50주년을 맞아 북한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 같이 말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후 주석이 (중북 양국이)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서로 대표단을 교환해 공동으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함으로써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그는 아울러 "후 주석이 협력정신을 강화하고 고위층 교류를 밀접하게 해 전략적인 소통을 심화하고 통치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중조(중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가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中, 화룡-남평 철도 10월 완공(7/12)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과 남평(南平) 통상구를 잇는 철도가 오는 10월 완공된다고 연변일보가 12일 보도했음. 남평은 북한 최대 철광인 무산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이 철도가 개통되면 무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의 중국 반입이 늘고 대북 교역도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음.
- 2009년 9월 착공한 이 철도는 11억9천600만 위안(1천970억 원)이 투입돼 두만강 유역의 화룡-남평 구간 43.8km를 연결하게 됨. 중국은 북한 철광 자원 확보를 위해 이 철도를 무산까지 연장하는 공사도 추진 중임.
- 중국 통화(通化)강철집단 등 중국의 3개 업체는 2005년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 광산 50년 개발권을 확보, 해마다 120만톤의 철광을 수입하고 있으며 화룡-남평 철도가 개통돼 접근성이 개선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대북 경제협력 강화와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은 장기적으로 화룡-남평-무산 철도를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임.
- 이렇게 되면 이 철도가 북·중 경협 벨트를 잇는 주요 교통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中, 北 온성 1일 관광 20년 만에 재개"(7/12)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북한의 최북단인 온성군을 다녀오는 1일 관광이 20년 만에 재개됐다고 연변일보가 12일 보도했음. 훈춘시가 훈춘 시타자 통상구에서 출발, 두만강을 건너 북한 경원 통상구를 거쳐 경원군과 온성군을 다녀오는 1일 관광을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훈춘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온성은 김일성 주석이 1933년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킬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는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왕재산 일대에 항일유적 기념비와 혁명박물관, 두루봉 혁명사적지 등이 있음.



- 훈춘시는 1991년 온성 1일 관광코스를 운영, 연간 5천700명의 관광객이 다녀왔으나 이 프로그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됐음.
- 올해 들어 훈춘에서 북한 라선, 러시아 극동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훈춘을 거쳐 라선을 다녀오는 자동차 관광이 시작되는 등 중국에서의 북한 관광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훈춘-블라디보스토크-라선을 잇는 여객선 관광도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음.

● "中, 단둥서 개성까지 도로 연결 계획"(7/12)

- 최근 북중 간의 나선 및 황금평 공동개발 같은 협력은 중국의 국가이익 극대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북한의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음.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평화포럼이 12일 서울 용산구 하이원빌리지에서 연 토론회에서 "(최근 북중협력은) 출해통로 확보라는 중국 동북지방의 국가전략과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북한의 전략이 결합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음.
- 안 센터장은 "북한의 나선 및 신의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 정도와 성장 잠재력이 크며 중국의 지린성(吉林省), 라오닝성(遼寧省) 개발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음.
- 특히 "신압록강대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중국 측에서는 3단계에 걸쳐 단둥(丹東)-신의주-평양-개성까지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간선 연계를 통한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 된다"고 밝혔음.
- 또 창지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의 대상지역에 대해 "창춘(長春)시-지린(吉林)시-투먼(圖門)시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창춘-지린에 이어 투먼과 훈춘(琿春)을 포함하는 '두만강 하류지역'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나선 및 황금평의 성공 가능성은 '나진 우선, 황금평 차선'이라는 중국의 속도 조절 여부와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에 대한 북한의 담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음.
- 안 센터장은 "북중 간 새로운 경제무역지대 조성의 증대는 북한 경제의 개방도를 높이고 시장화를 촉진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나선 및 황금평 경제무역지대는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에 가봤는데 그때 난핑(南平)은 아주 작은 시골마을에 불과했다"며 "중국의 계획대로 난핑과 무산이 2015년에 고속도로로 연결된다면 무산광산은 완전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김정일·김정은, 장더장 中부총리 접견(7/13)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방북한 장더장(張德江) 중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장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친선대표단과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을 접견했음.
- 이날 접견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과 리영호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내각 부총리 강석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영일, 김양건,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등이 참석했음.
- 장 부총리는 접견에서 "과거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주석이 조약을 체결한 것은 두 나라 관계에서 하나의 대사변"이라며 "두 나라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공동으로 보위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해 체결한 이 조약은 중조 인민 사이에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발전의 법적 담보"라고 말했음.
- 또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 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중국당과 정부는 전통적이며 특수한 중조친선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중조 최고영도자들 사이에 이룩된 광범한 합의들을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약 체결 후 지난 반세기 동안 두 나라 당과 정부는 조약의 정신에 맞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했다"고 화답하고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음.
-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보내는 인사를 건네고 김 위원장 부자에게 선물을 건넸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中 "북중우호조약, 지역안정에 적극적 역할"(7/14)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 14일 "중조(중북) 우호협력원조조약이 중국과 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지역의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중앙(CC)TV4채널이 최근 조중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연장 됐고, 다시 2021년이 유효기간이라고 보도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 그는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그것이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조 관계를 발전시켜서 지역



- 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음.
- 앞서 우리나라의 아리랑 TV 격의 중국 대외용 채널인 CCTV4는 지난 11일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에서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활동 소식을 전하고서 조중 우호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이라고 언급했음.
 - 당시 CCTV4의 아나운서는 마무리 언급에서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해 9월 10일 발효됐고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소개했음.
 - 그러나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에 유효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中 훈춘, 올 상반기 대북 교역 급증(7/15)

- 북한과 중국의 두만강 유역 교역 거점인 훈춘(琿春)의 대북 교역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춘의 대북 통상구(세관)인 권하(琿河)통상구의 올해 1-6월 수출입 화물량이 9만2천255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4% 증가했다고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했음.
- 이 기간 권하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인원도 10만5천20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7.1% 증가했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원정리와 마주한 권하통상구의 대북 교역량이 급증한 것은 라선특구 공동개발과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 착수, 대북 관광 활성화 등 북·중간 경제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두만강 유역에서 동해로 진출할 길이 열리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권하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했으며 공사에 쓰일 물자와 인력이 대거 북한에 들어갔음. 중국은 애초 이 공사를 올해 연말 완공하기로 했다가 공기를 앞당겨 오는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임.
- 북·중은 지난달 9일 착공식을 하면서 라선특구 공동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원정리-라진 도로보수 공사가 끝나고 라선특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라선 진출의 창구인 권하통상구의 대북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미 올해 2차례에 걸쳐 권하 통상구-라진항 루트를 통해 3만7천t의 석탄을 남방으로 시험 운송했음. 중국은 원정리-라진 도로보수가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라진항을 통해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임.
- 훈춘과 라선,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3국 무비자 관광과 창춘(長春)에서 출발, 훈춘을 거쳐 라선을 다녀오는 자동차 관광코스가 신설되고 북한 최북단인 온성 1일 관광이 20년 만에 재개되는 등 올해 들어 중국의 대북 관광도 활기를 띠고 있음.
- 러시아 극동과도 맞닿아 있는 훈춘의 올해 상반기 대러시아 교역량도 크게 늘었음. 대러시아 교역 거점인 훈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량과 출입국



인원이 각각 3만2천30명과 1만48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6.8%씩 증가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관리, 2006년 10월 이후 첫 일본 입국"(7/12)

- 일본이 2006년 10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북한 관리가 일본에 입국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음.
 - 손광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체육 차관 등 3명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했음.
 - 손 부위원장 등은 공항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체육조직 간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 관계자의 영접을 받은 뒤 도쿄 시내 숙소로 향했지만,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이후 방일하는 장 옹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 등과 합류한 뒤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북한 관리의 방일은 일본이 2006년 10월13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의 하나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금지한 이래 처음임.
 - 외무성은 지난 11일 장 옹 IOC 위원 등 북측 관계자 5명에 대해 11~15일 단시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했음. 이들은 방일 기간에 14일 OCA 총회와 관련 회의에만 참석할 수 있음.
 - 반노 유타카(伴野豊) 외무성 부대신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 등의 일본 입국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특정 국가의 출석을 거부하면 OCA 현장에 저촉되며,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 기 타

● "스웨덴·중국, WFP대북지원에 260만 달러 기부"(7/13)

- 스웨덴과 중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6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각각 기부키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음.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지난달 WFP에 대북 식량지원 사업으로 16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중국도 최근 WFP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WFP는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등 11개국의 기부로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18%인 3천786만 달러를 확보했음.

● "인권문제도 국제사회 북한 논의 초점돼야"(7/14)

-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해 권력 승계와 핵프로그램, 한반도 안보 문제 등에만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젠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핵심 논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베네딕트 로저스



- 동아시아 팀장은 13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북한 내 반인권 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부단장인 안나 로스바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럽의회 의원과 한반도 전문가, 유럽 시민단체 관계자, 교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집약된 여론은 북한 정권에는 큰 압력이 되고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에게는 유력한 공식 호소 창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 현 위원장은 특히 유럽연합(EU)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대화 창구를 유지해 오면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와 인도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제 사회의 여론 환기와 공조 강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벨기에 소재 국제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HRWF)'의 빌리 포르레 대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우열 수석부위원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유럽의회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고령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해온 일을 소개한 윤남근 인권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고문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구호는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유럽의회가 또다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할 방법 확대와 노력 강화 ▲2009년 유엔 인권위가 권고한, 북한에도 인권위를 설치하는 일 ▲정치범 수용소 등에 갇힌 어린이들의 즉각 석방 ▲한국전 포로 및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 유럽의회는 지난 2006년 6월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4년 1개월 만인 지난해 7월에 다시 대(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한편 영국과 브뤼셀에 각각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2명은 토론회에서 북한의 실생활과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북한에 있을 당시 국제 원조 식량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면서 배급의 투명성 확보에 회의를 표시했다.
 - 한 참석자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려 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시민단체가 벌이는 북한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 등에 EU



측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음.

- 이에 대해 로스바흐 의원은 라디오는 물론 위성방송을 통한 외부 소식 전파도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라디오 공급 지원 등과 관련해 현재로서 EU 지원의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음.
- 로스바흐 의원은 또 "EU는 북한 식량난이 심각, 굶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대북 긴급 구호를 재개했으나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례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강조한 뒤 북한 인권 문제는 EU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당국 및 시민단체들과도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유엔, 北에 환경관리기술 전수"(7/14)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 증진' 사업의 하나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국가과학기술위 소속 관리 10여 명을 초청해 환경관리 기술을 전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음.
- 북한 관리들은 지난 6월10일까지 태국의 아시아공과대학원에서 토양 침식, 홍수 등 자연재해 방지와 수자원활용 계획을 배웠음. 아시아공과대학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북한 고유의 지형과 특성에 맞춰 강의, 토론, 실습,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음.

● "난민탈북자 최다 국가는 영국...581명"(7/14)

- 난민 신분의 탈북자(북한이탈주민)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국가별 난민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난민신분 탈북자 917명의 63.3%인 581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음.
- 영국은 2004년 처음으로 탈북자 1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10년 이상 합법 체류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 영국에 이어 독일에 사는 난민 신분 탈북자가 14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네덜란드(32명), 호주, 미국(이상 25명씩), 캐나다(23명), 노르웨이, 러시아(이상 14명씩), 덴마크(9명), 스웨덴(8명), 아일랜드(6명), 스위스(4명), 키르기스스탄(3명), 이스라엘(2명) 등 순이었음. 독일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줄었음.
- 난민은 인종, 종교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데 난민 지위는 해당국이 심사과정을 거쳐 부여 여부를 결정함.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얻으면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됨.
-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연고 등 여러 이유로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일부는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초대 주북 英대사가 가이드' 北관광 신상품 등장(7/15)

- 제임스 호어 초대 북한주재 영국대사와 함께 북한의 대학교수, 학생과 만나고 학교, 공장 등을 견학하는 독특한 관광상품이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영국여행사 '폴리티컬 투어스'는 현재 호어 전 대사와 평양, 원산, 함흥, 개성 등을 방문하는 북한 관광상품의 예약을 받고 있음.
- 이 상품은 방북 전 이틀간 베이징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비롯해 남북관계, 북-6자회담간 외교적 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일정을 포함하고 있음.
- 북한 내 일정은 다른 관광상품과 비슷하지만 원산농업대학 교수와 학생을 만나고 익명의 '유명한'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은 독특하다고 RFA는 설명했다.
- 호어 전 대사와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가 함께 열흘 일정으로 계획한 이 상품의 가격은 1인당 2천350유로(한화 350만원 상당)로 베이징, 평양행 항공편 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멀린 美합참의장, 금주 방한(7/12)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이번 주 중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11일 전해졌음. 멀린 의장은 13일까지 예정된 중국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14일에 열릴 제임스 서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에도 참석할 예정임.
- 워싱턴 소식통은 "주한미사령관의 이·취임식에 가급적 합참의장이 참석해 왔던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멀린 의장은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는 9월 말 퇴임 예정인 멀린 의장은 지난 10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일본도 찾을 예정임. 멀린 의장의 이번 한·중·일 방문은 이들 3개국에 사실상의 고별 방문임.
- 한편 서먼 신임 주한미사령관에 대한 인준안은 지난달 29일 상원 군사



위를 통과한데 이어 30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을 통해 가결됐음.

● 美 "고엽제 관련 증거 아직 없다"(7/13)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 조사와 관련해 미군 측이 아직 고엽제와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미8군은 이날 한미 공동조사단 명의의 보도 자료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조사 결과 캠프 캐럴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미군은 "다수의 매체가 헬기장 1구역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결과 금속성 물체 또는 드럼통이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지구물리탐사는 단지 지하에 이상 징후가 있는 지역을 보여준 것이며 이러한 이상 징후는 금속성 물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이한 토양 밀도, 토양 구성 또는 지하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시추조사를 통해 기지에 고엽제가 매몰됐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가) 과학자들이 기지의 건강 위해성을 평가 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부쩍 잦아진 한중 왕래..전방위 교류 확대>(7/13)

- 한동안 뜸했던 한중 교류가 되살아나고 있음.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악화됐던 한중 관계가 올해 상반기부터 양국 정부와 의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것임.
- 우선 '정치 하한기'인 7월에 접어들면서 국회의원들의 중국행이 이어지는 흐름이 주목됨. 첫 테이프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끊었음. 손 대표는 지난 4~7일 '동북아 긴장 완화와 한·중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하겠다며 중국을 방문했음.
- 손 대표는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부주석,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 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 등을 만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고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역사학자·기업 최고경영자(CEO)·언론인 등 50여 명이 4박5일 일정으로 사단법인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을동)가 주최 및 주관하는 중국 북만주 '항일역사탐방'에 나섰다.
- 이밖에 13~16일에는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초당파 의원단 10명이 중국을 방문해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임.
- 17~22일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우윤근·이종구·조승수·최재성·구상찬·조윤선·홍정욱 의원 등 8명이 방중해 중국 전국인민대표



- 대회 의원들과 의회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 사실 양국 교류 재개의 신호탄은 지난 2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 간簾>)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었음. 양 부장은 방한 기간 김성환 외교 통상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 등을 만났으며 3월에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답방 차원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했음.
 -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조우할 예정임.
 - 또 4월에는 김항식 국무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 총리 등 중국 권력서열 1~3위를 잇달아 만났음. 김 총리의 방중은 특히 연평도 포격 이후 불거진 양국의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음.
 - 오는 14~16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음. 김 장관은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총참모장을 각각 만난 뒤 육·공군 부대를 방문할 계획임.
 -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대부분 극복했다는 방중"이라고 진단하고 "내년에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 하는 만큼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제10회 中선양 한국주간 '팡파르'(7/13)

- 올해로 10돌을 맞은 중국 선양(瀋陽) 한국주간 행사가 13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음. 이날 선양시가 마련한 환영 리셉션에는 선양시 쟡웨이(曾維) 서기와 조백상 주선양한국총영사, 한·중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음.
-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박진, 조진형, 안영환, 윤상현, 정옥임 의원도 참석, 10돌을 맞은 선양시 한국주간 행사를 축하했음. 쟡 서기와 조 총영사는 "한국주간을 통해 양국이 우애를 돈독하게 다지고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음.
- 선양시와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됨. 행사 기간 한·중 경제협작 교류행사, 한·중 기업 간 투자 협약 체결 등 양국 경협 증진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짐.
- 한국인과 조선족이 참가하는 노래자랑대회, 한국 전통 음식 시식회, 한·중 테니스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쳐짐.



● 韓 12개 기업, 中선양에 3천4백억 원 투자(7/14)

- 한국의 12개 기업체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3천400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음. CGV와 하나은행, 롯데백화점, 산업은행 등 12개 기업은 14일 선양 한국주간 행사 개막식에 맞춰 열린 투자 협약 체결식에서 3억2천779만 달러(3천466억 원)를 투자하는 협약을 선양시 정부와 체결했음.
- 롯데백화점은 선양시 황구(皇姑)구에 6천만 달러를 들여 백화점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 6천만 달러를 투자, 선베이(瀋北)신구에 금융서비스센터를 세우기로 했음.
-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선양에 사무소만 운영해온 산업은행은 3천125만 달러를 들여 선허(瀋河)구에 지점을 개설, 본격적인 금융업무에 나서기로 했음.
- CGV는 선허구에 1천500만 달러를 투자, 4D 영화관과 대형 영화관인 '스타리움관'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연내 개관할 계획임. 스타리움은 CGV가 독자 개발한 대형 영화관으로, 중국에서는 선양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됨. 선양한국총영사관도 이날 만룽(萬融)구 경제관리위원회와 선양한국국제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 김국방-시진핑, 국군포로가족 송환 의견교환(7/14)

- 중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을 예방하고 최근 탈북해 중국에 거주 중인 국군포로 가족 5명의 조기송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김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접견실에서 시 부주석과 만나 내년에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45분간 대화를 나눴음.
- 특히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베이징과 선양 총영사관에 있는 (탈북)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한국으로 송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 이에 시 부주석은 "관계 부처가 한국정부와 연락을 유지해 가면서 협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 또 김 장관은 작년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강한 표현으로 언급했음. 김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두 개의 도발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우리 국민에게도 경계심을 줬다"면서 "특히 20대인 (젊은)P세대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 변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히 저해했다"고 말했다.
- 그는 "미래 동북아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면서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 안정을 계속 유지하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시 부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



- 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인 상호신뢰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와 대화채널 구축이 발전됐으면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회담하고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양국 군사교류 관계 등을 논의했음.
- 김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해군)이 수색구조훈련(SAREX)을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음.
- 천빙더 총참모장은 "한국 해군 함정이 중국을 방문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시기는 실무부서가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회답했음. 하지만 천빙더 총참모장은 회담 시작 전 15분간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 '군사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임.
- 그는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과 군사훈련을 크게 했었는데 이는 난사(南沙) 4도에 개입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난사 주변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패권주의에 맞는 행동이나 표현이 있는데 미국이 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상징이다"고 비난했음.

● 한·중 국방장관, 군사대화 정상화 합의(7/15)

- 한국과 중국은 15일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소원했던 양국 군사관계를 복원하고 고위급 군사대화 등도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음. 김관진 국방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의 '8·1청사'에서 제8차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군사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준에 걸맞게 확대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특히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군사 분야 교류확대와 지역 안보정세 평가,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조속 체결,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활동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언론보도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합의사항 이행의지를 과시했음.
- 양국은 한국의 국방차관과 중국군 부총참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 전략대화'를 개설키로 하고 첫 번째 회의를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음.
- 매년 상호 교환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이 협의체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적 협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전략대화 채널이 연례화 되고 군사교육 교류가 정례화되는 것은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양국 간 교류



- 수준에 걸맞은 군사 교류 수준으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음.
- 양국은 지난 2005년 중단됐던 위관·영관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군사교육 교류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음. 임 실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는 인민해방군과 낙양 군사어학원 등에 24명의 장교를 연수토록 했으나 2005년부터 중국 측의 요구로 중단됐다"면서 "우선 그때 중단된 낙양 군사어학원 연수 등을 그때의 수준으로 내년부터 재개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또 국제적 규모의 재난구호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 구호 활동 과정에서 협력과 상호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유엔평화유지(PKO) 활동과 인도주의적인 재난 구호, 해적 퇴치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임 실장은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국방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국방학술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거나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 행사를 검토 중"이라면서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중국 국방부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전했음.
 - 이번 회담에서 김 장관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상과 군사적 모험주의, 도발위협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표명한 다음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이었고, 이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을 방지하는 확약이 있어야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음.
 - 김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서 기인한다.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과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위권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고 훈련과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음.
 - 이에 량 국방부장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 대해 진지하게 잘 들었다"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 측의 피해에 위문과 동정을 보낸다. 한국 측의 자제 노력은 정세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음.
 -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비롯한 동북아 발전에 대해 양국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면서 "특히 한반도의 핵문제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음.
 - 량 국방부장은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방식과 통로를 통해 북한을 설득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음.
 - 그는 "남북 양측이 자제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한·중은 합의 내용을 노력해서 실천으로 옮기고 양군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음. 하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경고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북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음.

- 처음으로 발표된 공동언론보도문에는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 사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건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했음.
-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회담에서 두 사건에 대해 세부적이고 강하게 말했다"면서 "중국 측도 상당히 우리 얘기를 실무선에서 공감하지만 공식화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다. 우리 의도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측도 여러 차례 바뀌 가면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 "한·중, 해양 유류오염 공동방제 추진"(7/15)

- 한·중 양국은 중국 보하이만(渤海灣)의 해상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해양 유류오염 공동방제를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 김경수 국제경제국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양국 간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보하이만 일대가 국제적 방제협력 시스템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에 적용을 받는 구역은 아니지만 기름 유출 사태가 한·중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양국간 공동방제 협조체제를 검토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날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중국 측은 "한번 검토해보자"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중국 국가해양국을 주축으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음.
- 정부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하고 공동대응을 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신각수 대사 "한일, 열린 민족주의 지향해야"(7/11)

- 신각수 신임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본 언론인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신 대사는 11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시아 3국의 민족주의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라며 "민족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닫힌 민족주의'는 21세기의 특징인 지역화·세계화 경향에 역행하는 만큼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 대사는 일본 민주당 정권 발족 이후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에 참배하지 않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일본 언론인의 질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경향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음.

- 대사 재임 중 한일 관계의 과제로는 대학생 등 풀뿌리 교류 확대와 정치인 교류 등을 거론했음.
-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사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남북관계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된다"며 "천안함·연평도 문제는 (6자회담과 관련된) 비핵화 트랙이 아니라 남북관계 트랙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日외무성, 독도비행 반발 "대한항공 이용 말라"(7/14)

-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음.
- 이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음.
-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승인했음.
-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음.
-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는 각료의 현지방문 등으로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외무성의 외교관들은 보통 여행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 타격은 별로 없겠지만 일본인 여행자들에게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정부, '대한항공 이용 말라' 일에 엄중항의(7/14)

-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해당 항공사의 이용을 자제토록 한데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엄중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음.
-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에어버스 380 항공기의 첫 운항에 앞서 기자단과 함께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으며,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측은 11일 오후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항의하고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외무성 직원의 대한항공 공무원승을 자제하도록 통보했음.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한항공 탑승을 자제토록 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재의 양국 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줄 것을 일본 측에 당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오는 17일 방한하는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임.
- 장 국장은 지난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유선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정운진 동북아과장이 일본 외무성 과장급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음.
- 정부 당국자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조 대변인은 대한항공이 독도 시범비행에 앞서 정부와 사전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한항공이 우리 영공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항공관제상의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어떠한 행동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번 사안이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일본 정부는 7월말 또는 8월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점쳐짐.

● 외교부 "되에 다양한 대응수단 강구"(7/15)

-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자제' 조치를 오는 18일 예정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다양한 대응수단을 강구해나가기로 했음. 정부 당국자는 15일 "일본이 해당 조치를 발효일 이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일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대응수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실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소속 직원들에게 일본 측 국적기 이용을 자제하고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등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는 1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독도기획



- 단회의를 열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음.
 - 외교부 장원삼 국장은 오는 17일 저녁 방한하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임.
 - 또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이 지나치게 고조돼 한일관계 전반과 동북아 안보현안 공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일본 외무성은 소속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토록 지시하면서 외무성이 주최하는 행사에 앞으로 한 달간 대한항공 관계자를 초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 **日 자민 의원 "독도 견제 차 울릉도 방문 하겠다"(7/15)**
- 일본 보수 야당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음.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위원장 대리는 이날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과 3일 다른 의원 3명과 함께 울릉도를 시찰 하겠다"고 밝혔음.
 - 신도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이들의 방한 목적은 한국 정부가 울릉도를 거점으로 삼아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남중국해 개입 자제 촉구(7/11)**

- 중국이 미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음. 중국 인민해방군의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은 11일 베이징(北京)에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그 같은 입장을 피력했음.
- 천 총참모장은 이어 "남중국해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해 중국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미국의 행동은 그와는 반대의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날 회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중국의 군사발전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열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수 십 년간 남중국해에 군을 배치해왔고,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변국과)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것이며, 남중국해의 불안정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은 남중국해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항해권 자유보장을 주장하고 있음.
- 열린 합참의장은 인민대학교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이 국제문제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바로 성장하는 중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음.
- 그는 특히 "중국의 군사력 성장에 따라 미중 양국 군 간에 더 많은 상호 교류와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로 오관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열린 합참의장은 10일 인민해방군(PLA) 제2포병 부대의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중국이 전략 미사일 전력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운데 열린 합참의장의 제2포병 부대 방문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음.
- 열린 합참의장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예방하고 귀보송(郭伯雄)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관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 시진핑, 美·中 군당국간 신뢰 촉구(7/12)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군과 미군 간의 상호 신뢰를 촉구했음. 시 국가부주석은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미 양국 국방부와 군 당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으로 장애를 제거하고 관계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부주석은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가운데 하나이고, 그 영향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중요성을 역설했음.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지난 1월 방미를 통해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거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상기시키면서, "현재 중미 군 관계도 이런 합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음.

● 中천빙더, 美에 항모건조 사실 확인(7/12)

- 중국의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에게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사실을 확인했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가 1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천 총참모장은 11일 "중국의 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여



- 러 미디어 매체들이 이미 많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는 할 말이 없다"고 언급했음.
- 그러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바랴그호를 매입했고 이를 개조하는 걸 미국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대국으로서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형으로, 중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항모 11척을 보유한 미국은 '진정한 세계 강대국'이며 그와 비교할 때 중국의 군사기술은 미국에 20~30년 뒤졌다"면서 항모 보유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천 총참모장은 같은 날 방중 이틀째인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항모건조 사실을 확인했음. 앞서 지난달 7일 홍콩상보(香港商報)는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천 총참모장이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치장궈(戚建國) 총참모장 조리가 "항공모함을 보유한 몇몇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항공모함을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천 총참모장은 그러나 멀린 미 합참의장에게 중국이 몇 척의 항모를 건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은 우크라이나서 1998년 2천만 달러에 구입한 항모 바랴그호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개조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5년까지 4만8천~6만4천급의 핵동력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중국 뉴스 사이트인 천룡망(千龍網)이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음.
 - 천 총참모장은 아울러 멀린 미 합참의장에게 사거리 2천700km의 대함탄도미사일인 동풍(東風)-21D의 개발 사실도 확인하면서 "동풍-21D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이며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 힐러리, 中 방문 다이빙궈와 회담 예정(7/1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5일 중국 선전(深천(土+川))을 방문,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갖는다고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공통의 관심사인 지역적 및 세계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토너 대변인은 말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음. 특히 최근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회견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11일간 일정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클린턴 장관은 이날 터키를 시작으로 홍콩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찾을 예정임.

● 中, 美의 신식민주의 발언 반박(7/16)



- 중국 상무부가 자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겨냥한 미국의 '신(新)식민주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음.
- 야오 대변인은 중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의 역사는 꽤 오래된 반면, 경제원조 통계를 인용해 중국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2천km의 철도와 3천km의 도로를 건설해주고, 100여 곳의 학교와 60여 곳의 병원을 지어줬으며 200억여위안의 채무를 탕감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원조 제공과 더불어 투자와 협력 사업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중국 기업에 현지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혜협력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역설했음.
- 야오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11일 힐러리 클린턴 미 장관이 잠비아에서 현지 방송인 '아프리카 360'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프리카 나라들은 신(新) 식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것임.

● 오바마, 달라이 라마 면담..中 격렬 반발(7/1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만났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이뤄진 것임. 예상대로 중국은 강력 반발했음.
- 백악관은 회동 뒤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와 티베트인 고유의 종교, 문화, 언어전통의 유지에 대한 강한 지지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티베트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측을 의식한 듯,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점도 재확인했음. 백악관은 "대통령이 미-중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티베트 간의 미해결 이견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대화도 촉구했음. 백악관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 측과의 대화가 곧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음.
- 달라이 라마는 회담 직후 만족감을 표시했음. 그는 AFP통신에 "오바마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인권, 종교의 자유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그는 티베트와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워싱턴에 있는 인권단체 국제티베트운동(ICT)의 대변인은 달라이 라마의 발언을 이같이 전하면서 그가 오바마 대통령과 재회해 정신적 유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백악관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가 아닌 사적인 공간인 관저의 맵룸(Map Room)을 회동 장소로 준비했음. 또 언론에 두 사람의 회동 모습을 직접 공개하지 않는 등 '로키 행보'를 보였음. 45분여간의 회동 뒤 백악관은 두 사람의 회동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음.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사전 경고에도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데 격렬히 반발했음.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이날 새벽 관영 신화통신을 통한 성명에서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훼손했다고 성토했음.
- 마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중국 내정에 대한 엄중간섭으로 중국인 감정을 해치고 중-미 관계를 손상시켰다"면서 강렬한 분노와 함께 결연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음. 또한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의 로버트 S 왕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긴급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아울러 장예쑤이(張業遂) 주미 중국대사도 워싱턴의 미국 국무부 측에 정식 항의했음.
- 앞서 중국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회동 일정이 발표되자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외국 정치인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런 행위는 양국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음.
- 티베트를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국가 분열을 획책하는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외국 지도자와 만나는데 거세게 항의해 왔음.
- 그러나 백악관은 회동에 앞서 15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달라이 라마 측 대표와 중국 정부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음.

마. 미·일 관계

● **의원들, 대북식량지원 금지 美에 촉구(7/13)**

-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의원들은 12일 대북식량지원은 북한 정권을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식량지원을 하지 말 것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일본 의회 내의 납치문제와 관련된 초당적 의원모임을 이끌고 있는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대표는 이날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과거 행태를 감안해, 쉽게 식량지원을 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음.
- 번스 차관은 일본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도 그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일본 의원들은 이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도 요구했음. 이에 대해 번스 차관은 일본 측의 요구를 유의 하겠다면서도 테러지원국 지정 절차는 복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번스 차관과 킹



특사는 이날 방문한 일본 의원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일본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바. 미·러 관계

● <푸틴·中총참모장, '빚더미' 美 향해 일격>(7/12)

- 막대한 재정적자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슈퍼파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지도자들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조롱 섞인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공개강연에서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QE2) 조치에 대해 '홀리건(난동꾼)'이란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손님인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앞에서 미국의 과도한 국방예산을 문제 삼아 혼수를 했음.
- 푸틴 총리는 11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막 찍어내 과도하게 공급하는 미국을 홀리건에 비유하며 조롱했음. 그는 "우리가 기축통화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무엇을 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단순히 홀리건처럼 행동할 뿐"이라고 말했다.
- 푸틴 총리는 "그들은 화폐인쇄기를 켜놓고 찍어낸 달러를 자신들의 발등의 불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로 날려 보내고 있다"면서 "그들은 외국이 독점하면 나쁘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돈 찍어내는 독점권을 100%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이중성을 꼬집었음.
- 달러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 상당수 국가는 미국 경제 회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처사라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음.
- 푸틴은 "미국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만약 그랬다면 버티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군 수뇌부인 천빙더 총참모장도 11일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면 납세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혼수를 뒀음.
- 그는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회복 중이란 것을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음.
- 천 총참모장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미국인의 민생개선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음. 그의 이 말은 자신이 초청한 미국 측 상대방 앞에서 한 이례적으로 도발적인 수위의 발언임.
- 여기에는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 붓는데 대한 반감과 함께 미국이 중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해온 데 대한 반격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임.



● 美-러, 입양소년 분쟁 '종지부'(7/14)

-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던 '입양소년 분쟁'과 관련, 13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입양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음.
- 이는 지난 2009년 미 테네시주로 입양된 7살짜리 러시아 소년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홀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태워져 러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임.
- 당시 러시아에서는 반미 여론이 들끓으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어린이를 입양한 미국 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외무부는 미국으로의 입양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합의문에 따르면 앞으로는 친족관계인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 입양을 알선할 수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입양 어린이의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합의문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인에 의해 입양된 어린이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합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미·러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또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자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음. 최근 초안이 마련된 양국 간 비자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사업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 36개월간 유효한 복수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 "이는 양국 간 비자면제를 위한 길을 연 것"이라면서 "올 연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 간소화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함께 양국 외무장관은 최근 체결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따라 1만7천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인 우라늄 34t을 폐기하는 합의문에도 서명했음.
- 이밖에 클린턴 장관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가능성과 관련, "이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으며, 이를 강력히 지지 한다"고 밝혔음.

● 러 하원 "美와의 입양 협정 우선 심의"(7/14)

-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아동 입양 관련 협정에 대한 러시아 하원 심의가 의원들의 여름휴가 이후 시작될 가을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4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안드레이 클리모프는 이날 "아동 보호 문제는 (지난해 11월 드미트리 메드베데



프) 대통령의 대(對) 의회 교서에서도 언급된 시안인 만큼 의원들이 미국과의 협정에 대한 심의를 가을 회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앞서 미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 워싱턴 D.C.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미국으로 입양되는 러시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음.
-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미국인은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신 감정을 거쳐야 하며, 친족관계인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 입양을 알선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조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미국 측이 지도록 하고 있음. 협정은 또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입양아는 러시아 국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中日 방위차관급 회담 3년4개월 만에 개최기로"(7/16)

- 중국과 일본이 2008년 3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방위 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빠르면 26일 일본 방위성에서 마샤오텐(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나가에 기미토(中江公人) 일본 방위성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양국은 이 회담에서 지난해 7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영유권 충돌 이후 중단된 양국 사무급(과장급) 방위 협의를 재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발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연락체제(해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요미우리신문은 나가에 차관이 미일 공통전략목표에 근거해 중국 군사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 향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일 방위 차관급 회담은 올해 3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일본대지진으로 연기됐음.

아. 기 타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2일 발리서 개최(7/13)

- 한국, 미국, 일본간의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졌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달 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기간을 전후해 이뤄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인도네시아, 홍콩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3국 외교장관회담 추진 사실을 발표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의 22일 발리 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정부와의 3국 회담 개최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 외



교장관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소위 '북핵 3단계 접근법'이 다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됨.

- 이에 앞서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말 김성환 외교장관의 방미 시 올여름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ARF서 남중국해 문제 거론에 韓 난색"(7/14)

- 미국이 이달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에 타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거론에 일본은 응할 방침이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중국해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중국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분쟁을 빚고 있는 곳임.
- 미국은 중국도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앞두고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음. 미국은 남중국해가 한미일 3국의 해상교통로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하길 원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달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전략 목표로 항해의 자유와 해양 안전의 보장 유지를 명기했고, 이달에는 미국, 일본, 호주가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아사히신문은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역사적 사정을 고려해 안전보장 문제에서 중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려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두드러진 발언을 자제해왔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도록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대립할 경우 남북 관계에서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 최종적으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